



보도시점: 2025. 7. 29.(화) 08:30 배포: 2025. 7. 22.(화) 08:30

“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”...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‘합의’ 이뤄내

- 국민권익위, 평창군·국가철도공단·한국철도공사 등의 이견을 조정해 평창역사 주차장 확충 방안 합의 도출, 향후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기대

-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의 ‘조정’으로 해결됐다.

국민권익위는 평창군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.

- 2017년 12월 22일 서울-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.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,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(4차선, 연장 200m)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,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

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였으며,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.

-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, 마침내 모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.

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▲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*를 평창군으로 이관하고, ▲평창군은 이관받은 역사 진입 도로변과 부체도로의 경사면(사면부) 등을 활용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되 평창역사 주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지도를 설치하며, ▲한국철도공사는 주차장 확충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·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.

* 부체도로(附替道路):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 도로가 철도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

-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“이번 조정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,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공갈등을 조정·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교통도로민원과	책임자	과 장	이재구 (044-200-7501)
		담당자	조사관	최용환 (044-200-7513)

